

###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안)

우리는 199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남,북한, 필리핀, 대만, 일본 등 5개국이 참여하여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우리들의 힘으로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금안을 철회시키고,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공동 토론하는데 있다.

1992년 8월 10-11일에 서울에서 있었던 제 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힘쓰고 있는 모든 민간단체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우리들의 공동요구로 일본정부에게 강제연행사실의 인정, 전모에 대한 진상조사와 비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공개사죄할 것, 국제법에 따라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배상할 것, 그리고 인권유린사실을 역사교과서에 명기하고 가르칠 것을 요구하였다.

1993년 10월 21-22일까지 일본에서 열렸던 제 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는 남,북한,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일본정부에게 전쟁범죄 인정과 국가별 피해자 총수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피해자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전쟁범죄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시효부적용 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운동을 펼친 결과,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조사하도록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고, 인권위원회에서 임명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금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1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국가가 범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범죄'이며 일본정부는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국제법률가협회(ICJ)는 1994년 11월 22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방법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권고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65년 한.일협정, 비일조약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아시아 피해국들의 요구와 국제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간위로금안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역사속에 은폐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모욕하고 있다.

1995년은 전후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 전쟁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고단한 삶에서, 아시아 민중들의 분노속에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존재하는 한 전쟁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통해서 평화와 우호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행동계획을 공표한다.

1.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금안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아시아의 연대를 강화한다.
2.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한다.
3. 유엔이 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활동 등을 통해 일본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게 한다.
4. 일본정부가 PCA제소에 응하게 하고, 특별배상법을 제정하도록 각국의 운동을 확대하고, 특별히 일본의 양심있는 국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5. 북경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세계에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를 알리고, 세계여성운동과 연대한다.
6. ILO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세계 각국 노동운동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7. 아시아피해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정부에게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요구한다.

1995년 2월 28일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 일동